

1. 개요

- 일시 / 장소 : '20. 10. 26(월). 10:00~12:10 / 농특위 22층 버텍스홀
- 참석 인원 : 17명
 - (TF 팀) 정은조 단장, 이학래, 배재수, 최무열, 민경택, 김종원, 박미선, 이임영, 이성권 위원 (9명)
 - (관련기관) 산림청 송경호 과장, 이동진 사무관, 김기철 사무관 / 농촌경제연구원 김나현 연구원 / 산림조합중앙회 장진구 팀장 (5명)
 - (사무국) 임성규 농어촌정책팀장, 윤종혁 사무관, 오황기 전문관(3명)
- 주요 내용
 - 의제관련 정책연구용역 보고 및 검토
 - * 「산림의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경영구조 개선 방안」
 - 산림분야 현안사항 설명(산림청) 및 논의
 - '21년 산림TF 의제 주제 선정에 대한 의견수렴
 - 농어업·농어촌분야 뉴딜(안)에 대한 의견수렴
 - '19년 의결사항 추진실적 점검·평가 보고
 - 산림TF 추후 일정 등 논의

2. 회의 결과

- 「산림의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경영구조 개선 방안」 연구용역 검토
 - 전년도 안전화 과정에서 '본 위원회에서 다루기에는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의제를 핵심적인 사항으로 간결하게 기술
 - 임업직불제는 산림청에서 TF를 구성하여 추진중이며 서삼석 의원이 입법발의를 한 상황임. 앞으로 본격적인 법안심사과정에서

임업인,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농특위 내에서 여론 형성을 주도

- ‘산림복지’와 ‘목재이용’에 대해 2가지 정도 핵심과제 제안 필요하며, 우리나라의 산림경영은 산림자원에 집중되어 있는데 향후 30년을 바로보는 정책수준에서는 산림자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통해 ‘산림복지’와 ‘목재이용’을 포괄할 수 있는 복지의 개념을 적용
- 주요 현안인 부동산과 코로나와 관련하여 산림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국가적인 아젠다로 제시
- 국민들이 생활공간에서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을 의제로 선정하되 기존에 정책들 중에서 좀더 강조할 부분을 찾을 필요가 있음
 - ‘시장창출’ 관점에서 귀산촌과 연계된 주택 관련, 산림복지에 대한 국가주도 운영을 탈피한 산업화, 단기소득임산물 재배자와 관련된 먹거리 등
- 산림의 공익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경영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면 공익형직불제를 제외하는 것은 어려움. 산림은 탄소를 통해 공익가치의 증가분에 대하여 계량화가 가능하므로 산주들에게 최소 투자비용 이상을 보전해주는 체계를 제시.
경영구조개선은 산주 개별 경영은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단위 경영을 통한 규모화로 목재뿐만 아니라 산림탄소, 산림복지 등 산림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
-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해 국가에서 실행하면 ‘복지’, 사유림에서 실행하면 ‘경제활동’으로 인식하여 두 개념이 상충되고 있는데 양쪽 다 산림복지로 인식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산림복지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민간주도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수 있는 방향설정이 필요함. 복지서비스를 국가 등 공공기관에서 이미 많은 부분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나,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이 공존하듯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하게 민관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국·공·사립 휴양림 등 운영현황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고, 지역별 국공립 및 사립휴양림, 선도경영단지 등을 산림TF에서 현장 방문하여 조사 필요

□ '21년 산림TF 의제 주제 선정에 대한 의견수렴

- 의제 도출이 쉽지 않으므로 차기 산림TF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미참석하신 위원분들께도 차기 회의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안내 조치

□ 농어업·농어촌분야 뉴딜(안)에 대한 의견수렴

- 국가차원의 '온실가스 순제로' 추진하고 농림축산분야는 산림분야로 인해 '순흡수'로 표시되도록 해야 함
- 임도밀도 13m/ha은 과도한 설정이며, 산림예산 규모를 감안할때 현실성이 부족함. 기존 산림기본계획에 제시된 목표치 수준이 적정

□ (향후 일정) 산림TF 일정 등 논의

- 차기 산림TF 회의 일정 : 11. 18.(수) 15:00
- 국·공·사립휴양림에 대한 현장방문 일정(잠정) : 11. 12.(목)
 - 산림청 및 연구진과 상의하여 일정 조율하여 추진